

▶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이학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부실”

최영일 “장애인단체 지원”
최인정 “군산조선소 살려야”
허남주 “인권센터 전문성”
이학수 “방역체계 재정비”



최영일 의원



최인정 의원



허남주 의원



이학수 의원

전북도의회 제340회 임시회가 14일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영일 의원(더민주.순창)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에는 52만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이 있음에도 장애인 복지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북도가 전국의 장애인 복지수준 평균을 뛰어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급여 기준 및 수당체계를 마련, 시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은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반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정부가 지역 상생은커녕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조선업 불황을 타

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어느 하나 군산조선소가 해당하거나 효과를 낸 경우가 없다는 것이 군산조선소와 관련 업체들의 증언”이라며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우리 군산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군산조선소 폐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군산조선소를 포기한 것이고 군산과 전북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북도가 작업의 사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인권센터가 승진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센터보다는 올바른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 인권전문성을 갖추고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더민주.정읍)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체계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백신의 항체 형성을 조사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역 당국과 도는 구제역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백신접종과 방역체계의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역 전담 인력도 확대해 방역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재용 기자

김광수 의원, 기금운용본부 정착 지원책 촉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오는 25일 전주지역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2013년 6월 말,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끝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을 때 전주 이전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그에 대비할 시간이 3년 6개월이나 있었지만 공사와 논란에만 매몰돼 이전 대책 마련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의 구속, 정보유출 등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적절한 급여수준 제공,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적극 발굴·채용 등 기금운용본부 인력이탈 방지 및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이 서로 윈윈하는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김관영 의원, 입산부 정기검진시 ‘보호자 동행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산부의 정기검진시 보호자인 근로자가 동행할 수 있게 사용자에게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입산부의 안전과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입산부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배우자의 가족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인 근로자만 정기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 대다수가 정기검진을 받을 때 이동시 안전보장과 태아와 입산부 상태를 확인을 위해 배우자나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둘 이상)인 경우 검진시간 동안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사회적인 이유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입산부의 검진시간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인 상황에 정부 해결 대책들이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입산부와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도 저출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근 기자

안철수 전 대표, 전북 방문해 민심 구애 공들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공을 들였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전남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전북까지 방문하며 호남권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지역을 본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지지를 정체 현상은 정권 차원의 ‘안철수 축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보수진영은 (대선후보 지지율) 아무리 많이도 20~25%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나머지 75~80%로 정권교체의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 간 양강구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양강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근거로 “국민은 누가 더 정직한지, 누가 더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 누가 실제로 정치적 어려움을 뚫고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누가 책임져왔는지, 누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민약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자신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격차가 진행되고 한 분야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서 “지역 격차도 영호남 격차뿐만 아니라 전남북 격차까지 격차문제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4일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 굉장히 심각하네, 이 문제를 푸는 게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전북 농심(農心)을 겨냥해 “지금 국제곡물가격을 보고 경제학적으론만 접근해 절대농지를 줄이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선 소중한

땅에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남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지만 이

“문재인과 양강구도 대결 될 것” “격차 해소가 대통령 최고 임무”

날은 자극적인 단어의 사용을 피했다.
토론회 이후 안 전 대표는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전북지식인네트워크 회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군산으로 이동해 군산조선소 준치 범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인재용 기자

이성일 의원, 군산조선소 투-트랙 대응전략 제안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과 협력사 도산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주목하고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이성일 의원은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과 폐쇄로 확산되고 있는 군산의 경제위기에 대한 투-트랙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의 존치’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전북도는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도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군산의 인적·물적·사회자원을 토대로 경제활동 시스템 강화를 위해 1년에 20억씩 3년간 150개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을 긴급 제안했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용